

구미 찾은 文 “배터리산업 생태계 강화 계기… 전폭 지원”

구미형 일자리 LG BCM 공장 착공식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요성 강조
국내 투자로 신산업 경쟁력 제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구미형 일자리 LG BCM(배터리 코어 머티리얼) 공장 착공식’에 참석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형 일자리 관련 행사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방문, 격려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구미 컨벤션 센터(구미코)에서 열린 구미형 일자리 양극대 생산을 위해 설립된 LG화학 자회사 LG BCM 공장 착공식에 참석한 가운데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구미 현장 방문은 일본 수출규제 직후인 2019년 7월 ‘구미형 일자리 투자협약식’ 참석 이후 2년 6개월여 만이다.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후 대선 정국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구미에 방문한 셈이기도 하다.

착공식은 ‘상생의 미래, 구미가 담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북 구미시 구미코에서 열린 구미형 일자리 LG BCM(Battery Core Material) 공장 착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다!’라는 표어 아래 열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LG화학(LG BCM), 유관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테크노파크), 노·사·민·정 협의회, 지역 5산단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해 ‘지역 노·사·민·정이 주체가 돼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찾

기 위한 시도’라고 규정한 뒤 “노·사·민·정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으면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 투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임기 동안 국가균형발전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해 조광

역협력(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광역철도망 구축)도 추진한 만큼, 상생형 일자리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착공식에서 “구미산단은 언제나 한발 앞선 도전과 혁신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다. 산단 노후화와 대기업 이전의 어려움 역시 스마트 산단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이겨내고 있다”면서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더 발전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약 6만 6000㎡(2만평) 규모의 국가산단부지 50년 무상임대 ▲575억원 규모의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상생협력기금 조성 참여 등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2019년 7월 상생협약 이후 구미산단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4조원이 넘는 투자 유치 성과가 있었다”며 “구미형 일자리를 확실한 성공 사례로 만들어 더 많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번 착공식이 구미형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문 대통령은 “이번 투자로 8200개가 넘는 일자리 생겨난다. 지역 청년들이 자라난 곳에서 꿈을 펼치게 될 것”이라며 “마이스터고, 금오공대를 비롯한 지역 교육기관도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G화학과 지자체가 함께 100억 원 규모의 ESG펀드, 협력기금 60억원 조성 등 사례를 언급하며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과 친환경 전환 속도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구미형 일자리를 글로벌 공급망 경쟁의 핵심 중 하나인 배터리 산업 투자인 만큼 “구미형 일자리를 배터리산업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경북 지역에 소재 장비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배터리 관련 분야 우수 기업이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구미형 일자리와 서로 연계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교류, 공동 연구 개발을 돕겠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北, 새해 두번째 탄도미사일… 종전선언 찬물 與 “사기 취업”… ‘김건희 방지법’ 발의

합참 “700km 이상 비행”
군, 추가 발사 대비 태세 유지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오늘 07시 27분경 북한이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에 이어 북한은 새해 초부터 1주일 사이 2회에 걸쳐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힘줘온 종전선언에 찬물을 뿌린 셈이다.

이날 합참에 따르면 발사체는 700km 이상을 비행했다. 최대고도는 약 60km, 최대속도는 마하 10내외로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은 앞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 당국은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렇지만, 이날 합참은 연이은 북한

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서육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도발이 아니라는 낙관으로 말한 발언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서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으로부터 ‘이번 북한의탄도미사일 발사도 도발로 규정하긴 어려운가’라는 질문을 받고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과 영토, 영해, 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돼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2월 개최하는 ‘북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무력도발을 자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렇지만,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범여권

에서 흔들림 없이 주장해온 ‘종전선언’을 비롯기라도 한듯, 새해초부터 연이어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수위 높은 무력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이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 분위기 속에 북한이 중국의 묵시적 승인 하에 독자적인 군사기술강화를 가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즉 꾸준히 추진해 온 신형무기의 성능확인과 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 속에서도 대통령선거를 앞둔 범여권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의 안보적 불안감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군 당국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

/문형철 기자 captinm@

김동연, 대선출마 선언 영상 NFT 발행

경매수익 모두 기부 예정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사진)가 11일 자신의 대선출마 선언 영상을 NFT(대체불가토큰)로 발행했다. NFT는 블록체인의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토큰으로, NFT를 활용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증명 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만들 수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NFT 스타트업 ‘코인플러그’를 방문해 20대 임직원들과 NFT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부총리 재임 당시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 접한 후



이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애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류 역사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특히 자신의 대선 출마 영상을 이날 오전 11시 11분에 NFT로 발행하고 해당 NFT를 오는 3월 10일까지 경매에 붙이는 등 혁신 경제 행보를 보여줬다.

변준환 코인플러그 이사는 “세계 최

초로 대통령 출마 영상을 NFT 발행하는 김동연 후보의 행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하신 것처럼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모습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코인플러그가 운영하는 NFT 플랫폼 ‘메타파이’를 통해 향후 3일 마다 한 개의 영상 또는 사진 NFT를 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제 20대 대선 대선 출마 영상 ▲한국신탁은행 수험표 ▲미시건 대학교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 ▲아주대학교 총장 퇴임식 ▲국무조정실장 시절 원전비리 대책 발표 등이 메타파이에 올라올 예정이다. 선거 이후 경매수익은 모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새로운 의혹 추가 제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이 허위이력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하는 일명 ‘김건희 재발방지법’ 추진과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의혹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추가 제기하며 김 씨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문제는 교육·시민단체들이 규정한 것처럼 교육 사기 사건이자 명백하게 불법을 저지른 사기 취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 씨가 채용된 5개 대학 채용 지원서류에는 무려 20건이 넘는 허위이력이 드러났다.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반교육적인 불법행위”라며 “김 씨는 돈보이기 위한 단순한 오기이고 실수라고 해명했고, 윤 후보도 김 씨는 관행이고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씨의 허위이력 문제는 단순한 오기나 실수가 아닌 채용 자격과 심사 점수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이력을 기재한 사기 취업 사건”이라며 강사 이력을 정교사로 기재한 허위이력 기재와 (사)한국게임산업협회 등 근무 기간 허위이력 기재를 언급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상 강사는 정교사로 기재할 수 없고,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수는 부교수로 기재할 수 없다. 또 서울대 규정상 경영전문대학원 학위는 경영석사사 아닌 경영전문석사로 표기해야 한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김 씨는 허위이력으로 취업했다는 사기 취업 의혹에

‘김건희 재발방지법’ 주요 내용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 안민석의원대표 발의

교원 채용 지원서류 허위이력 적발시

- 1 임용 취소
- 2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
- 3 발급된 경력증명서 반납·폐기
- 4 급여 환수
- 5 신규 채용, 특별 채용 제한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윤 후보도 가족에게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윤석열 자신의 외치는 공정과도 맞지 않는 사기 취업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안민석의원 발의한 ‘김건희 재발방지법’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김 씨의 허위이력 문제는 교원 채용에 대한 공정의 문제”라며 “대선 후보의 배우자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방패 삼아 임용기간이 끝나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원 채용 지원서류에 허위이력이 적발되면 ▲임용 취소 ▲임용이 끝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 및 발급된 경력증명서는 반납 또는 폐기, 급여는 환수 규정 ▲학교 및 대학 교원으로 신규 채용 및 특별 채용 금지하도록 규정해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교단에서 퇴출하는 법안이다.

아울러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가 한국폴리텍대에 임용하기 위해 재직기간을 조작한 의혹이 새로 드러났다고 추가 의혹을 폭로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